

# 下山 손학규 민주 탈당... “7공화국 열겠다”

### 개헌 고리로 제3지대서 ‘대선 재판짜기’ 시동

### 이찬열 등 일부 손학규계 동반 탈당할 듯

손학규 전 민주당 상임고문은 20일 정계 복귀와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이는 제3지대에서 개헌을 고리로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면서 내년 대선 구도는 더욱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특히, 손 전 고문이 제3지대에 자리를 잡고 안철수 전 대표 등 국민의당이 합세하고 비문(비문재인)·비박(비박근혜) 잠룡들이 가세, 판을 키워간다면 정계 개편과 함께 내년 대선에서 3자 구도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여기에서 민주당 내 손학규계로 분류되는 인사 10여명 가운데 3선의 이찬열(수원갑) 의원이 이르면 21일 탈당할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어디까지 확산될 것인지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손 전 고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와 경제의 새 판짜기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정계복귀를 선언했다. 지난 2014년 7월 30일 보궐선거에서 패배한 뒤 하루 만에 정계에서 은퇴 선언을 한지 2년 3개월만이다.

그는 이어 “의원, 장관, 도지사, 당 대표를 하며 얻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당직도 버리겠다”며 민주당 탈당을 선언했다.

손 전 고문은 정치 재계의 동력으로 개헌을 강조했다. 그는 “제가 무엇이 되겠다는(생각), 꼭 대통령 되겠다는 생각이 없다”며 “명운이 다한 6공화국 대통령이 되는 것이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고, 제7공화국을 열고 꺼져버린 경제에 엔진을 달아 다시 시동을 걸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만 보고 소결심으로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개헌에 대한 의지 표명이기도 하지 만 경우에 따라 개헌이 없이는 대선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혀 논란이 예고되는 지점이다.

그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 “대한민국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진단한 뒤,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수출 주도형 대기업 중심 경제구조가 혁신 없이 50년 동안 지속되면서 그늘을 질게 드리우고 있고, 그 결과 비정규직 문제 청년 실업 문제 가계부채 문제들이 악순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그 경제구조의 버팀목인 수출 실적도 19개월 이상 감소 추세”라며 “고통스럽더라도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87년 헌법 체제가 만든 6공화국은 그 운을 다했고, 지난 30년 동안 조금씩 수렁에 빠지기 시작한 리더십은 이제 완전히 실종됐다”며 “6공화국 체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더 이상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없다. 이제 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전 고문의 정계 복귀에 정치권은 여론보다는 우선 야권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야권의 잠룡 가운데 선두를 달리는 문재인 전 대표가 송민순 회고록 파문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손 전 고문의 민주당 탈당과 정계 복귀는 야권의 대선 구도를 뒤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손 전 고문은 이날 기자회견 직전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자신과 가까운 민주당 소속 의원을 10여명과 회동을 갖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는 예상은 됐지만 손 전 고문의 탈당이 뼈 아프다는 지적이며 국민의당



“정계 복귀 합니다”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정계복귀를 선언한 뒤 회견장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으로서 대선에 앞두고 활로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론도 손 전 고문의 정계 복귀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제3지대 이동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으며 비박 잠룡들의 합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국민의당 새 비대위원장 인선 신경전

### 호남그룹 “親安 인사 대선 부담...3선 이상은 돼야”

### 安 그룹 “호남당 프레임 위험...변화상징 초선으로”

국민의당 차기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놓고 당내 안철수 전 대표 그룹과 호남 중진 그룹 사이에 미묘한 갈등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주목된다.

오는 28일 선임되는 차기 비대위원장은 올 연말로 예정돼 있는 전당대회 관리에 몰두할 수밖에 없게 대우해야 한다는 점에서 임기가 2개월 정도에 불과하지만 정치적 비중이 큰 자리다. 특히, 차기 비대위원장은 대표 및 지도부 선출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자리이기도 하다.

일단 호남 중진 그룹에서는 차기 비대위원장이 어느 정도 정치적 경륜이 있어야 전당대회도 성공적으로 치르고 대선 정국 초반에 거대 여야에 밀리지 않고 당의 정치적 존재감을 살릴 수 있다는 논리를 내놓고 있다.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3선 이상의 중진이 차기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친안(친 안철수) 성향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대선을 앞두고 오히려 국민의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진 그룹에서는 4선인 광주의 김동철 의원과 전북의 조배숙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안철수 전 대표 그룹에서는 호남 중진보다는 정치적 색채가 얇은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부적으로는 여성 비례대표인 신용현 의원이 적합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2기 비대위원장 모두 호남 중진이 맡는다면 ‘호남당’이라는 지역적 프레임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 전문가 영업 케이스인 신 의원은 초선으로 변화를 상징하는 정치적 신선함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은 이번 주말이 내내 주춤 기점으로 차기 비대위원장 선입과 관련 당내 의견을 취합할 것으로 알려졌다. 말 그대로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부 경선으로 선출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고 소모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당 5개월만에 지지율 1위

### 리얼미터 설문...박대통령 지지율 27.2%로 하락

‘최소심씨 의혹’이 확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26%를 기록한 데 이어, 20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조사에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취임 후 해당 기관 조사로는 처음 20%대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5개월여 만에 더불어민주당에 1위 자리를 내줬다.

리얼미터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성인남녀 1529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10월 2주차 주간집계 대비 4.2%포인트 하락했다.

이에 따라 리얼미터 조사로는 사상 최저치인 27.2%를 기록했다. 3주째 하락세를 이어가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30%를 넘어섰으며 부정평가 또한 3.5%포인트 상승해 65.5%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송민순 회고록’ 파동으로 안보 정국

이 조성됐음에도 이념·연령·지역을 불문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새누리당 또한 이정현 대표 출범 후 처음으로 민주당에 밀려 2위로 내려앉았다. 새누리당의 지지도는 지난 조사 대비 2.6%포인트 하락한 28.9%였다. 민주당보다 0.3%포인트 낮다. 수도권과 PK지역, 50대 이상과 20대, 진보층과 보수층, 중도층 등 대부분 지역과 계층에서 지지도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다.

또 전화면접(CATI), 스마트폰용(SPA),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임의결기(RDD) 및 의의스마트프탈림(RDSP) 방법으로 조사했고,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야 “禹 증인 나서야” vs 여 “검찰수사중” 국감 출석 공방

### 야 “불출석시 동행명령권 발부”

국회 운영위원회의 20일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날 국감 주제와 무관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증인 출석 문제가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은 다음날(21일)로 예정된 대통령서실 국감에 우 수석이 관례에 따라 불출석을 양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호막을 쳤지만 야당은 우 수석이 밝힌 불출석 사유가 부적절하며 위원회 차원의 동행명령권 발부를 경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원주 의원은 의

사진행발언을 통해 우 수석이 전날 불출석 사유서에서 밝힌 ‘국정현안 신속 대응과 검찰수사 진행 중’ 부분을 언급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백만 양보해서 오전에는 비서실장이 나오고, 특정 시간에 민정수석이 나오면 된다”면서 “국회 증인·감정에 관한 법률에는 누구든 출석 요구에 응하게 돼 있는 만큼 수사 진행 중이라는 것은 더더욱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관례상 불출석은 운영위 국감에서 민정수석 관련 사안이 중요하지 않다는 여야간 합의 속에서 허용됐다”면서 “내일 출석하지 않

으면 동행명령권 의결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용호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에 민정수석이 출석한 것은 5차례”라면서 “국감에 3차례, 현안보고와 심지어 결산 심사에도 참석한 전례가 있으므로 관례를 이유로 한 불출석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은 “민정수석의 경우 국회 불출석을 양해하는 게 수십 년에 걸친 국회 관례”라면서 “1988년 이후 총 120차례나 운영위가 열렸는데 민정수석이 출석한 사례는 5차례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검찰수사를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는데, 집요하게 요구하는 건 ‘정권 흔들기’를 위한 것이므로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전이 계속되자 정진석 운영위원장은 “우리 헌법은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결정이 국회에서 검증되고 추진되도록 만들어 졌다”면서 “주요 공직자들은 끊임없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는 게 옳고, 대통령의 주요 참모도 이런 원칙은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